

학생인권조례,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한다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서럽다가 감격했다가 외로웠다가 충만했다가, 그토록 온갖 가지 감정의 파도에 출렁거려야 했던 시절이 또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마감일을 고작 1개월 앞두고 목표 서명인(유권자 1%인 8만2천여 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지만 '실패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몇 십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동안 겨우 8만 명의 동의도 얻어 내지 못한 진보'라는 조롱이나 '서울시민 1%도 동의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를 성급히 추진하는 진보교육감 OUT!'이라는 보수의 공격이 쏟아져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자기 문제임에도 서명권한이 없어 어른들의 참여를 호소할 길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이 사회와 기성세대에게 던지게 될 냉소와 좌절은 어쩌나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던 날들. 그런데 마감일을 앞두고 서명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목표치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곤 다시 추가 서명을 모아야 할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불과 닷새 만에 무효로 판정된 수만급 서명인을 모아내야 했다. 놀랍게도!! 우리는 3만 명이 넘는 서명인을 추가로 모아냈다. 아슬아슬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냈기에 더더욱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아슬아슬함을 빚어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온 학교의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고 교육의 속살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누구에게는 시기상조로 들릴지 모르지만, 학생인권 보장은 지난 몇 십 년 간 한국사회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요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늘 변방으로 쫓겨났고, 학교의 변화는 더디었으며, 제도적 뒷받침은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었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항을 삽입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 하나가 삽입되는 결과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학생인권은 후퇴의 연속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익히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교육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시인 유하의 말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면,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는 법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무수한 법들 앞에서 상상력을 굴복시키는 법이라면, 힘 앞에서 굴종하는 법이라면, 이 사회 민주주의에는 미래가 있을까? 학생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진정 염려하는 것도 학생들이 자기 존재의 거처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기 시작하고 그 질문을 사회로, 국가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교육을 망친다느니,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느니 하는 보수의 맹공격 속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9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뒤이어 서울에서는 교육·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민발의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이 인권의식을 성숙시키고 학교현장을 준비시키는 과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운명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려나갈 때 학교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6개월이란 시한 내에 지금껏 주변부에 머물러왔던 '학생인권'이라는 의제에 대한 유권자 1%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 의제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연거푸 말을 걸고 호소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다. 조직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단체들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민번호를 몽땅 기입해야 하는 서명을 꺼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학생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었다. '학생이 인권이 어디 있어?!'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학생을 단지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볼 때 자율보다는 통제를 선호하게 된다. 이 방식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세대간 갈등, 교사-학생 사이의 관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해나가야 했다.

게다가 교충의 성명과 몇몇 언론의 기획적 보도로 '교사를 공격하는 무서운 학생이 늘고 있다'거나 '교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먹혀들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인권이나 교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인권은 중요하지 않냐'고 되묻는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교사의 부당한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기에 교사를 긴장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폭력과 차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정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서야 학생도 교사도 존중받고, 학교 안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과정에서도, 이미 조례가 통과된 경기 교육현장에서도 다수 교사들은 소극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이 미성숙하다거나 교사로서 위엄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랜 관념 때문인지, 수업을 방해하거나 동료들을 힘들게 만드는 학생들에 대한 난감함 때문인지 짐작하기 힘들다. 전자라면 학생관, 교육관을 바꿔야 하고 위엄이라는 것이 강요될 때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된다는 점을 알아차릴 일이고, 후자라면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육체적·정신적 안녕을 돌볼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을 늘려나갈 일이다. 현장의 준비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야말로 현장을 준비시키는 과정 아닐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진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이 살아야 (교권이 아닌) 교사인권도 산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은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치고 있다. 성숙한 방식으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이 더 성숙할 수 있고 구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학생과 교사와 충돌할 이유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추가 서명까지 10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기 위해 우리는 100만명에게 학생인권과 민주교육의 중요성을, 차별과 폭력 없는 교육을 바라는 열망을 건넸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또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학생이든 교사가든 아니면 다른 누구이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힘을 길러냈을 거라 믿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홀로 지기 어려운 책임은 나누어 맡을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될 토양도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들과, 그 누구보다도 교사들과 뜨겁게 나누고픈 까닭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설령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폭력의 교육'보다는 낫다는 믿음, 그 부작용을 헤쳐나갈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